



“지연되는 제주4·3 보상, 대책 세울 것”

윤호중 행안부장관, 김한규 의원 지적에 인력 확충 통한 조속 심사 밝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연이 매년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4·3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지연을 지적하고 조속한 심사 절차 진행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4·3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상

금 심의 절차 지연, 보상 심의회 위원 결원 등의 요인으로 인해 매년 보상금 지급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4·3희생자 보상금은 지급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결정된 민법상 상속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하면 지급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예산의 13% 정도가 지급되지 못했고, 지난 3년간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만 1500억원이 넘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가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행안부 보상 심의회 위원 7명 중 5명이 결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상금 심사 과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인력 확충을 비롯한 대책을 세우겠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로 인해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명예회복”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이번 정부 내에서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

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한편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신청은 2022년 5월 20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신청 공고’에 따라 2022년 6월 1일부터 6차에 걸쳐 접수하고 있다.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지난 7월 기준 지급대상 유족 7만3092명에게 총 5364억원이 지급됐다. 지금까지 4·3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은 1만5088명이며, 4·3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최종 심의·의결한 희생자는 7181명으로 이 중 6888명의 희생자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했다. 서울=부미현기자

관광지 바가지, 법률로 강력 단속되나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장관들과 공개 토론
‘해삼 한 접시 7만원’ 거론… “공공 피해 너무 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지방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바가지요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옹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쟁성장전략을 주제로 장관들과 토론하면서 “외국인들의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제일 큰 장애요인은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과 강원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강원도 타격이 엄청난 모양이던데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느냐”며 “(상인들이) ‘나는 비싸게 (요금을) 받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라고 재차 물었다.

부산의 경우 자갈치 시장에서 해삼 한 접시에 7만원을 낸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됐고, 강원도 속초에서는 한 가게가 오징어 값을 과도하게 받아 논란이 되자 지역 상인회가 사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봐야 겠고, 각 상권 활성화 재단이 나 상인연합회 등이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유도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사소한 이득을 얻으려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이것을 그냥 자율적인 상황이라고 방치할 일인가.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데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바가지요금이) 생각보다 주변에 엄청 피해를 입힌다.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에서도 지난해 ‘비계삼겹살’에 이어 피서용품 바가지요금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관광 이미지 타격 등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업종별 권장가격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관광 물가에 대한 일원화된 소통 창구를 개설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가정용전화기 있는 가구 제주 100곳 중 13곳 불과

휴대전화 사용 급증에 따라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100가구 가운데 13가구만 가정용 전화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전국 4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용 전화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제주지역 응답률은 13.4%(일반전화기 12.0%, 인터넷전화기 1.4%)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20.4%(일반전화기 16.5%, 인터넷전화기 3.9%)에 견줘 7.0%p 낮았다.

2023년 응답률은 제주 15.4%(일반전화기 15.2%, 인터넷전화기 0.2%), 전국 24.9%(일반전화기 18.8%, 인터넷전화기 5.1%)였다. 2022년 응답률은 제주 21.6%(일반전화기 20.1%, 인터넷전화기 1.5%), 전국 27.9%(일반전화기 22.8%, 인터넷전화기 5.1%)였다. 지난 2년 동안 제주 8.2%p, 전국은 7.5%p 각각 하락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가구수는 28만9000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2000가구(0.8%), 5년전과 비교하면 2만7000가구(10.5%)가 늘었다. 백금탁기자



적양배추 심는 농촌 2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소나기를 맞으며 적양배추 모종을 이식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송풍기 성능검사제 도입 제주시, 전국 최초… “성능 기준 미달 제품 차단”

제주시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송풍기를 설치할 때는 현장에서 직접 실측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주시는 9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검사 때 송풍기 성능을 현장에서 직접 실측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원천 차단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 점검과 전문

가 토론회에서 계속 제기된 송풍기 성능 저하 문제와 제주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상 성능인증서 제출만으로 설치가 가능했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송풍기는 성능인증서 제출만으로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현장점검에서 인증서에 기재된 성능(100ℓ/분)보다 실제 토출

량이 크게 낮은 사례(약 70ℓ/분)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생활방조 내 산소 공급 부족으로 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사전검사 단계에서부터 송풍기 토출구에 풍량 측정장비를 연결해 실측 검사를 의무화하고, 필요 공기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완·교체를 요구한 뒤 재검사를 통해 적합 제품만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구덕’·‘불턱’ 활용 자원순환 정책 행정안전부 장관상

제주 전통 문화인 ‘구덕’과 ‘불턱’을 활용한 자원순환 정책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친환경 전통시장을 향한 발걸음, 우리 모두 구덕(GOOD WALK) 해요!’ 과제로 우수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수상작인 ‘친환경 전통시장을 향한 발걸음, 우리 모두 구덕 해요!’는 제주도 고유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형 공간정책이다.

제주 전통 바구니인 ‘구덕’을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의 상징으로, 해녀들의 휴식 공간이었던 ‘불턱’을 취식 공간으로 재해석해 ‘구덕’(다회용기)에 구매한 음식을 담고, ‘불턱’(취식 공간)에서 식사 후 구덕을 반납한다

이번 과제는 도민, 전문가, 서비

스디자이너, 공무원이 참여한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이 4개월간 회의, 제주 동문시장 야시장 고체 설문조사 및 상인 심층 인터뷰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완성했다.

이번 수상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로 제주’ 비전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지역 고유 문화와 전통을 현대적으로 활용한 창의적 해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이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국비 3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이 직접 참여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까지 마련한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5회 제주한우 경진대회

한우·흑우, 제주를 말하다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한흑우 문화 축제 -

2025년 9월 5일 ▶ 6일 오전 10시~
시민복지타운 잔디광장

시 상 식 2025년 9월 5일 16시 30분 시민복지타운 잔디광장
경진대회 8개 부분, 총 22농가
8개 부문: 외모(한우 4개, 흑우 2개) 육질(한우·흑우 거세)
프로그램 피크닉 버스킹 / 한우 경매쇼 / 한우 흑우 OX퀴즈 /
한우 흑우 가면 패션쇼 / 홍보전시관운영 / 플리마켓 운영

제주한흑우경진대회 추진위원장 박 창 석 제 주 농 협 본 부 장 고 우 일
제 주 축 산 농 협 조 합 장 천 창 수 서귀포시축산농협 조합장 김 용 관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사)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주관 | 농협제주본부 후원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제주축산농협, 서귀포시축산농협
협조 | 한국축육개량협회 제주사업소,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농협사료 전남지사

